

[청구인] ○○○○

[피청구인] ○○○구청장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기각」 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○○○○○. ○. ○. 청구인에게 한 「식품위생법위반
영업정지처분」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○○○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인천광역시 ○○○구 ○○○로○번길 ○, ○층(○○동) 소재 ‘○○○룸클럽(○○○.○○㎡)’ (이하 ‘이 사건 업소’라 한다)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○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:○○경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다. 이에 피청구인은 ○○○○○. ○. ○○.청구인에게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○○○○○. ○. ○. 청구인에게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(○○○○○. ○. ○○. ~ ○. ○○.)의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2. 청구인 주장

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청구인은 사건당일 적발되었던 손님과 도우미는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업소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받은 점,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승계받기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,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어 만약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.

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,000,000원의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승계하겠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. 이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할 당시 이 사건 위반사실과 향후 있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·타당하다.

4.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

가. 관계법령

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89조 [별표 23]

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청구인은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인천광역시 ○○구 ○○○로○번길 ○○, ○층(○○동) 소재 ‘○○○룸클럽(○○○.○○㎡)’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.

2) 청구인은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:○○경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고 ○○○○. ○. ○○. 인천○○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.

3) 위 2)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○○○○. ○. ○○.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2,000,000원 처분을 받았다.

4) 위 2)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○○○○. ○. ○○. 청구인에게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○○○○. ○. ○. 청구인에게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(○○○○. ○. ○○. ~ ○. ○○.)의 처분을 하였다.

다. 판단

1)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,

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 23]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1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,

가) 「식품위생법」 제78조에서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후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그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,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여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,

나)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상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사건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실장이었으며 청구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,000,000원 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. 따라서 성매매알선과 관련한 사회적 정서상 엄중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위반사실이 명백한 이상, 청구인의 경제적 사

정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보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